

멕시코의 정부-기업 관계

- '정부-대기업의 수평적 유착관계' 성립요인* -

강경희(제주대학교 강사)

글의 순서

- I. 서론
- II. 멕시코 정부-기업 관계의 전개과정
- III. '정부-대기업의 수평적 유착관계' 형성요인
- IV. 정부-대기업 수평적 유착관계의 한계와 문제점

I. 서론

멕시코의 정부와 기업은 1980년대 말 들어 과거의 수직적 협력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수평적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이는 멕시코의 정치경제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살리나스 정부는 집권 후, 수출-금융부문 대기업인들의 적극적 협력 하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입의 전통과 수입대체 산업화의 유산으로 인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어 왔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멕시코의 신속하고 적

* 이 논문은 1999년 12월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멕시코의 정부-기업 관계: 1980년대 말 정부-대기업의 정치적 유착관계 형성을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극적인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정부와 수출-금융부문 대기업인들간의 긴밀한 유착에 의해 가능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기업인들의 수평적 유착은 멕시코 정치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정부의 극소수 테크노크라트 부문과 수출-금융부문 대기업인들간의 정치적 유착은 지극히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워서 정책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을 초래했고, 이는 멕시코 정치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멕시코 정치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돼 온 정치세력은 “기업부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초반까지 멕시코 기업부문의 정치참여는 제도적으로 거의 배제되어 왔다. 기업부문의 정치적 입장은 단지 정부가 기업통제의 일환으로 조직한 회의소연맹이나 또는 기업협회 등을 통해서 표출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들어 멕시코 기업부문은 에체베리아(Luis Echeverría)와 뾰르띠요(López Portillo)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제반 정책들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초 외채위기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반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1960-70년대 기업부문의 정치화 경향은 멕시코뿐 아니라,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도 개혁주의 또는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선 경험이 있었는데, 브라질의 굴라르(João Goulart, 1961-1964) 정부, 칠레의 인민연합 정부(1970-73), 아르헨티나의 페론(Juan Domingo Peron, 1973-74) 정부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당시, 라틴아메리카 기업부문은 개혁주의 및 사회주의 정부가 추진하는 제반 정책을 견제하고 저지하기 위해 활발한 반정부 정치활동을 수행해 나간 바 있었다.

1970년대까지 갈등관계에 있었던 라틴아메리카의 정부와 기업부문은 1980년대 초반의 “외채위기”를 계기로 최악의 대립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외채위기의 원인이 개혁주의 또는 사회주의 정부가 추진한 경제발전 모델과, 시장 및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있다고 보는 기업인들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채권국가들

의 외채재협상 조건인 IMF식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라틴아메리카 정부-기업 관계는 점차 화해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더욱 가속화되는 1990년대 들어와서 라틴아메리카 기업부문은 자국 정부와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옴은 물론, 정부정책의 결정과정과 실행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기에 이른다.

본 논문은 라틴아메리카 기업부문이 최근 20년 간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핵심적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는지, 그리고 1990년대 들어 형성된 라틴아메리카 정부-기업 관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멕시코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군사정권 퇴진과 민간정권의 수립이라는 급격한 정치변화를 경험한 반면, 멕시코의 경우는 점진적인 정치자유화 과정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의 사례연구는 멕시코에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점진적인 정치자유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부의 일부 분파와 극소수 대기업부문의 협소한 정치적 유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멕시코 정부-기업 관계의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멕시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정치지형 변화간에 이루어진 상관성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멕시코의 정부-기업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유형과 특징을 보여왔는지, 그리고 멕시코 정치에서 기업세력의 역할은 어떠했으며 최근에는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또 멕시코 정부-기업 관계의 현재적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정부-대기업의 수평적 유착관계'¹⁾가 멕시코에서 급격한 정치변화를 겪지 않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인식 하에, 멕시코의 '정부-대기

1) 본 논문에서 '정부-대기업의 수평적 유착관계'라는 의미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주도하는 정부분파와 이에 대해 적극적 지지입장을 표명하는 기업분파간에 이루어진 정치적 유착관계를 의미한다.

업의 수평적 유착관계’의 형성요인을 설명할 것이다. 멕시코 ‘정부-대기업의 수평적 유착관계’를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예로는 곤체이로 보르quez(Elvira Concheiro Bórquez)의 *El gran acuerdo: gobierno y empresarios en la modernización*(Bórquez 1996)와 셱커(Strom Cronan Thacker)의 *From Silent to Active Parter: Big Business, the State and Free Trade in Mexico*(Thacker 1996)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곤체이로 보르quez는 멕시코 정부와 대기업부문의 정치협약은 1980년대 후반 발생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기업의 정치협약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멕시코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와 대기업의 공통된 인식이, 그들 상호간 수평적 유착관계 형성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곤체이로 보르quez의 연구는 멕시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정부-대기업의 정치협약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심도 깊게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곤체이로 보르quez는 정부와 기업 각각의 내부에 존재했던 역동적인 혼계모니 투쟁과정 및 내부 세력관계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音箱의 연구는 멕시코 ‘정부-대기업의 수평적 유착관계’ 형성과정에서 보이는 정부와 기업 각각의 내부 혼계모니 투쟁과 세력관계의 변화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音箱은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멕시코가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급속히 이행하게 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관료(*tecnoburócratas*)와 수출-금융부문 기업인들이 각각 정부와 기업부문 내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후 서로 유착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다.音箱의 분석은 1980년대 이후 정부와 기업부문 내에 각각 어떠한 분파들이 존재했으며, 어떠한 쟁점들이 논의되었고,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는가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을 준다. 그러나 그의 분석은 멕시코 무역정책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대기업의 수평적 유착관계’의 형성요인 중 정치구조나 경제구조의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멕시코 ‘정부-대기업의 수평적 유착관계’ 형성요인을 정부조직 내부의 세력관계 변화, 기업조직 내의 세력관계 변화,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 세 가지 변수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조직 내부의 세력관계 변화와 관련하여 정부여당이었던 ‘제도혁명당’(PRI: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의 수구세력이 대거 탈당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개혁파 신진세력이 당내 주도권을 장악하는 과정이 설명될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조직 내 세력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기업부문의 정치적 대표기구인 ‘기업조정위원회’(CCE: Consejo Coordinador Empresarial) 회장직을 둘러싼 내부경쟁에서 수출-금융부문 기업인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1) 멜라마드리드(Miguel de la Madrid, 1982-88) 정부에서 추진된 IMF식 신자유주의 개혁이 실패하고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정책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었다는 점, 2) 1988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행동당’(PAN: Partido Acción Nacional)과 ‘민주혁명당’(PRD: Partido Revolucionario Democrático)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제도혁명당’의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획기적 대안이 필요했던 상황이 설명될 것이다.

II. 멕시코 정부-기업 관계의 전개과정

1. 1940-70년: 정부-기업의 수직적 협력관계²⁾

멕시코의 정부-기업 관계는 대략 1940-70년의 수직적 협력기,

2) 예외적인 경우는 마페오스(Adolfo López Mateos, 1958-64) 정부 시기이다. 마페오스 정권기 정부와 기업부문이 갈등관계를 보였던 이유는 마페오스 정부가 쿠바 사회주의 정권을 승인하고 멕시코 내 외국인소유 전기회사를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었다(Hansen 1971, 221; Valdés Ugalde 1997, 144). 그러나 마페오스 정부 시기 정부-기업의 갈등관계는 친기업적 성향의 오르다스(Gustavo Díaz Ordaz, 1964-70)가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후 다시 협력관계로 전환하였다.

1970-88년의 전환기, 1988-현재까지의 수평적 유착기 등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 1〉 멕시코 정부-기업 관계의 시기별 유형과 특징

연도	정부-기업 관계	정부-기업 관계의 특징
1940-70	수직적 협력기	정부의 일방적 기업통제. 기업부문간 웅집력 결여 및 정치활동 미비.
1970-88	전환기	1970-82: 기업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시작. 1982-85: 기업부문의 정치투쟁 확대 및 다양화. 1985-88: 수출-금융 기업부문, 정부와의 화해모색. 멕시코 북부지역 기업인, 정치투쟁 지속.
1988-현재	수평적 유착기	수출-금융 기업부문, 제도정치의 주도세력으로 등장. 멕시코 북부지역 기업인, 반정부 정치활동 지속.

1940-70년 멕시코 정부-기업 관계의 특징으로는 정부의 일방적 기업통제와 기업부문의 정치적 자율성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기업통제 메커니즘은 멕시코혁명 직후인 1917년부터 구상되기 시작하여, 1930년대 말 까르데나스(Lázaro Cárdenas, 1934-40) 정부에 의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었다. 멕시코혁명 직후인 1917년에 까란사(Venustiano Carranza, 1917-20) 정부는 근대적 형태의 기업단체³⁾를 결성하기 시작했다. 당시 산업-무역-노동부 장관인 빠니(Alberto J. Pani)는 까란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17년 11월에 '전국상업회의소연맹'(CONCANACO: Confederación Nacional de Cámaras de Comercios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을, 1918년 9월에는 '전국산업회의소연맹'(CONCAMIN: Confederación Nacional de

3) 멕시코 최초의 기업단체는 1874년에 결성된 '멕시코상업회의소'(Cámara de Comercio de la Ciudad de México)였다. 디아스(Porfirio Díaz, 1876-1910)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1차산품 수출지향 경제구조가 정착됨에 따라 '상업 및 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국 15개 주요 도시에서 상업회의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전국수준의 회의소로는 1906년에 들어 결성된 '광업회의소'(Cámara de Minería)가 최초였고, 이 회의소들은 1908년 제1차 회의소법이 선포된 후 기업인들의 합법적 대표기구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Arriola Woog 1982, 19).

Cámaras Industriales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을 각각 창설했다(Arriola Woog 1982, 17).

까란사 정부가 친정부적 기업단체를 결성한 의도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인의 지지를 확보하고, 기업부문의 반정부적 조직화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혁명 후 폐쇄된 국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을 채택고자 했고, 기업부문의 입장에서는 기업인들간 응집력 결여 및 자본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립된 경제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 기업통제에 대한 기업부문의 반발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20년대 말 뽀르페스 힐(Emilio Portes Gil) 정부의 ‘연방노동법’(Ley Federal del Trabajo)⁴⁾ 선포를 계기로, 멕시코 북부지역 몬떼레이(Monterrey) 출신 기업인들⁵⁾은 기업부문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며 ‘멕시코고용주연맹’(COPARMEX: Confederación Patronal de la República Mexicana)이라는 기업단체를 창설했다. 몬떼레이 출신 기업인 루이스 사다(Luis G. Sada)가 이끌었던 이 기업부문은 1929년에 발표된 정부의 ‘연방노동법’이 지나치게 친노동자적이라고 비판하며, 노동‘조합’에 대립되는 조직인 고용주‘조합’을 결성할 것을 주장했다. ‘멕시코고용주연맹’(COPARMEX)은 또한 연방노동법이 “모든 계급과 계층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법의 집행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국내기업의 투자회수와 해

4) ‘연방노동법’의 목적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노동자조직들은 여러 지방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효율적인 노동통제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따라 ‘연방노동법’은 정부-기업-노동조합간의 상호 견제와 협력, 고용주의 노동자 해고권 제한, 폭력시위나 공공서비스 부문의 파업 불법화, 정부의 노동통제권 제도화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Hamilton 1991, 96).

5) 멕시코 북부지역의 몬떼레이 기업들은 다른 지역 기업들에 비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어 기업인들간의 응집력과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기업들은 19세기 중반에는 면화재배, 광산업,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1890년대 이후 외국기업과 공동으로 제조업부문에 투자하기 시작하여, 1900년에는 ‘몬떼레이 철강회사’(Fundidora de Fierro y Acero de Monterrey)를 설립했다. 특히, 멕시코 북부지역 기업인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가르사 사다(Sada y Garza Sada) 가족은 1891년 꾸아우떼목 맥주회사(Cervecería Cuauhtémoc)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들을 창설하였다(Meyer & Clair 1992, 18-20).

외로의 자본도피가 발생하고 외국인투자도 현격히 감소함으로써 실업과 인플레가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Arriola Woog 1982, 18).

연방노동법 제정을 계기로 촉발된 정부-기업의 대립관계는 1936년 까르데나스 대통령이 발표한 ‘상공회의소법’과 ‘몰수법’ 제정을 통해 더욱 심화되었다. 까르데나스 정부의 ‘상공회의소법’에 따르면, ‘전국 상업회의소연맹’(CONCANACO)과 ‘전국산업회의소연맹’(CONCAMIN)은 ‘공공적 성격을 지닌 자치기관’이며, 500페소(당시 250달러) 이상의 자본을 소유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회의소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었다. 단, 500페소 이하의 자본소유 기업의 경우는 ‘국가경제부’(Ministro de la Economía Nacional) 산하에 산업별회의소나 중소기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민간기구’ 성격으로만 회의소 설립이 허가되었다.

까르데나스 정부의 상공회의소법 가운데 정부와 기업부문간 갈등을 촉발시킨 조항은 ‘전국상업회의소연맹’(CONCANACO)과 ‘전국산업회의소연맹’(CONCAMIN)을 ‘전국상공연맹’(Confederación Nacional de Comercio e Industria)으로 통합한다는 부분이었다(Arriola Woog 1988a, 52). 기업인들은 까르데나스 정부의 ‘전국상공연맹’ 구상이 상업과 산업부문간 이해관계의 차이를 무시한 일방적 처사라며 반발했다(Valdés Ugalde 1997, 118).

까르데나스 정부와 기업부문이 최악의 대립관계로 접어들게 된 계기는 1936년 9월의 ‘몰수법’(Ley de Expropiación)⁶⁾ 선포였다. 정부의 ‘몰수법’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한 기업부문은 1920년대 ‘연방노동법’ 제정에 반발하며 창설된 ‘멕시코고용주연맹’(COPARMEX)과 멕시코 북부의 몬떼레이 기업인들이었다. 이 기업인들은 정부가 ‘몰수법’을 통해 경제개입을 더욱 확대하고 결국 국가를 사회주의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더 나아가 몬떼레이 기업인들은 조업 중단과 반정부 투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기업인들의 이러한 반발에 대

6) ‘몰수법’에는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정부가 어떠한 종류의 소유권도 몰수할 수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에 따라 까르데나스 정부는 외국인 소유의 수출농지, 석유지대, 지하자원 등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은행 및 제반 산업에 대한 통제권도 확보할 수 있었다(Hamilton 1991, 155-188).

해 카르데나스 정부도 강경한 대응을 하였는데, 당시 정부의 입장은 “몬페레이 기업인들에 보내는 까르데나스 장군의 14개 조항(14 puntos del General Cárdenas a los industriales de Monterrey)⁷⁾”을 통해 분명하게 표명되었다.

까르데나스 정부와 몬페레이 기업인들간 첨예한 갈등관계는 후임 대통령인 까마초(Ávila Camacho, 1940-46)가 집권하면서 화해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 후 1970년대 초반까지 멕시코에서 정부와 기업부문은 ‘정부우위의 수직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멕시코의 정부와 기업부문이 30여 년 이상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안정적 고도성장에 힘입어, 정부가 기업부문의 제반 요구를 충족시켜 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⁸⁾

7) “몬페레이 기업인들에 보내는 까르데나스 장군의 14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정부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노사간 고질적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모든 사회경제부문과 협력관계를 확립한다. 2) ‘산업노동자연합본부(Central Unida de Trabajadores Industriales)’를 창설하여 노동조합들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게 한다. 3) 정부는 사회생활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4) 정부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5) 노동운동은 개별노조가 아닌 ‘산업노동자연합본부’를 통한 경우에만 합법성이 인정된다. 6) 고용주들은 노동자조직들의 사회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 7) 고용주들도 전국노조와 같은 형태의 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8) 정부는 국가경제의 적극적 후원을 통해 국내산업을 발전시킨다. 9) 사회적 동요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국가운명을 결정할 힘이 없다. 오히려 사회적 동요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대와 요구를 무시하고 노동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올바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10) 소수 공산주의자들의 존재는 멕시코에만 있는 문제도 아니고 새로운 현상도 아니다. 유럽,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도 공산주의의 집단이 있다. 이들은 정부, 기업, 사회제도 중 어느 것도 위협하지 않는다. 11)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국가에 해로운 것은 살인광, 범법자, 반혁명세력들이다. 12) 최근 고용주들의 동요는 몬페레이뿐 아니라, 라라구나(La Laguna), 레온(León), 멕시코시티, 뿐에블라(Puebla), 유카탄(Yucatán) 등에도 존재한다. 13) 고용주들의 동요는 정치투쟁으로 전개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러할 경우, 우리는 무장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14) 사회투쟁으로 무기력한 기업들은 노동자와 정부에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는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애국적 행위이다. 그러나 기업인들의 파업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Arriola Woog 1988a, 231-232).
- 8) 특히, 2단계 수입대체산업화가 진행된 1956-70년은 멕시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고도의 경제성장’, 이른바 ‘안정적 성장기(desarrollo estabilizador)’를 맞았던 시기였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수입대체산업화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 수입대체산업화 단계에서는 부족한 국내자본과 낙후된 기술력을 감안해 선진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 신발, 의류 등 비내구성 최종소비재의 수입대체가 진행되었다.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또한 멕시코의 조합주의(corporatism) 정치체제⁹⁾도 30여 년 간 정부-기업의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합주의 정치체제는 기업부문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중간계층 등 모든 사회부문을 효과적인 통치할 수 있는 정치적 메커니즘을 형성해 줄 수 있었다. 특히, 기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조합주의적 통제 메커니즘은 1941년 까마초 정부가 개정한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확립되었다.

1941년 상공회의소법은 까르데나스 정부가 '공공적 성격을 지닌 자치기관'으로 규정하였던 '전국상업회의소연맹(CONCANACO)'과 '전국산업회의소연맹(CONCAMIN)'의 성격을 '국가의 자문기관' 또

도입은 1차 산품 수출소득으로 충당되었다. 멕시코의 경우,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여파로 도래한 1차 산품 가격인상과 수출 붐을 이용해 1단계 수입대체산업화를 진행시킬 수 있었다(Valenzuela Feijoo 1986, 28). 그러나 그후 1차 산품 수출 붐이 끝난 후 1단계 수입대체산업화가 한계에 직면하자, 멕시코는 다음 일곱 가지를 목표로 하는 2단계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1) 국내기업과 국내시장간의 연계를 증대시킨다. 2) 정부가 기업의 소비재 생산자금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외국은행에 대한 금융종속을 극복한다. 3) 산업발전의 고도화를 통해 자율적 경제발전을 모색한다. 4) 정부는 외국인 소유의 가스, 석유, 전력, 광산 등 기간산업들을 국유화하거나 매입함으로써, 이 산업부문의 대외의존도를 줄인다. 5) 정부는 자연자원, 금융, 노동력, 기술에 대한 합리적 사용을 통해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6) 노동생산성 증대와 생산가격 절감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한다. 7)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통해 국내산업과 국내기업을 육성한다(Sotelo Valencia 1993, 25-26).

- 9) 멕시코 조합주의 정치체제는 까예스(Plutarco Elías Calles)에 의해 기본 틀이 갖추어졌고, 까르데나스 정부에 의해 형성되었다. 까예스는 혁명 이후 지속되어 온 권력투쟁과 정치불안 상황을 극복하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을 체계 내부로 흡수하려는 목적으로 1929년 '국민혁명당(PNR: Partido Nacional Revolucionario)'을 창당했다. 그러나 '국민혁명당'은 구체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근대적 정당이기보다는 일부 당지도자들의 개인적 권력욕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까르데나스 정부는 1938년 '국민혁명당'을 '멕시코혁명당(PRM: Partido Revolucionario Mexicano)'으로 개칭하고, 당을 노동자, 농민, 민중계층, 군대 등 네 부문으로 편재했다(Anguiano 1993; Horcasitas 1993). '멕시코혁명당'이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 층으로 하는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이었던 반면, 1946년 까마초 정부에 의해 개조된 '제도혁명당(PRI: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은 계급협조주의, 민족주의, 민중주의를 새로운 정당이념으로 채택하고, '멕시코노동자연맹(CTM: 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México)', '전국농민연맹(CNC: Confederación Nacional Campesina)', '전국민중조직연맹(CNOP: Confederación Nacional de Organizaciones Populares)'으로 편재되었다(Meyer & Reyna 1989, 310-311). '제도혁명당'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연합의 성격을 갖추고, 당내 반대세력의 인정과 포섭, 당 하부조직에 대한 후견주의(clientelism), 야당 및 체제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 혁명정당으로서의 정통성 부여 등을 통해 현재까지 멕시코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는 ‘공공이익을 위한 조직’으로 바꿔놓았다. 또한 1941년 상공회의소법은 기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보다 용이하도록, 정부가 기업단체 회의의 소집권과 해산권을 갖도록 했으며, 기업단체들의 정치활동은 금지되었다. 1941년 상공회의소법은 까르데나스 정부가 ‘전국상공연맹’으로 통합했던 ‘전국상업회의소연맹’과 ‘전국산업회의소연맹’은 다시 분리되었고, 기업인들은 이중 단지 하나의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Cypher 1992, 66-67; Purcell & Kaufman Purcell 1977, 196; Mizrahi 1992, 740-750). 뿐만 아니라, 친정부적 성격의 기업단체인 ‘전국제조업회의소(CANACINTRA: Cá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 la Transformación)’를 ‘전국산업회의소연맹’ 내에 두도록 승인되어 기업단체의 친정부화를 모색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1941년 상공회의소법은 정부에게는 강력한 기업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부문에는 분리와 분열을 조장해, 기업부문이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거나 반정부 정치활동을 시도할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Mizrahi 1992, 750-752).

2. 1970-88년: 정부-기업 관계의 전환기

1970-88년은 멕시코의 정부-기업 관계가 수직적 협력관계에서 수평적 유착관계로 이행하는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정부-기업 관계는 다시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70-82년은 기업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시작된 정부-기업의 갈등기, 1982-85년은 기업부문의 정치투쟁 확대 및 다양화로 인한 정부-기업의 극단적 대립기, 1985-88년은 수출-금융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의 화해모색기 등이 그것이다.

1) 1970-82년: 정부-기업의 갈등관계

1970년대 들어 멕시코 정부가 기업부문과 갈등관계에 접어들게 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멕시코 북부지역 중소

기업인이 반정부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30여 년 간 지속된 고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성장해 온 멕시코 북부의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보조금, 신용, 특혜 등 경제지원이 주로 대기업 위주로 지급되는 데 대해 불만을 품어왔다. 1970년대 들어와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의 종말을 고하자,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현격히 저하되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맞아 정부가 모든 기업부문에 대해 좀 더 공평하게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음으로, 에체베리아(1970-76)와 뾰르띠요(1976-82) 정부의 반(反)기업적 정책 때문이었다. 1968년 틀라멜루꼬(Tlatelolco) 학살사건¹⁰⁾의 책임자라는 부담을 안고 취임한 에체베리아 대통령은 집권 직후 시민사회에 불만을 해소하고자,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정당의 합법화를 포함한 정치자유화 조치(Middlebrook 1986)와 ‘분배를 동반한 발전’이라는 친민중적 경제정책¹¹⁾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멕시코 북부지역의 기업인들은 정부의 정치자유화 조치가 게릴라 운동, 강도, 납치, 살인 등 극단적 정치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했다(Arriola Woog 1988a, 92-94). 또한 기업인들은 ‘분배를 동반한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1971년 ‘소득세와 임대세 관련 개혁법 및 부가법’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다. 왜냐하면 그 법이 무기명 주식의 정리, 자본소득세의 확대, 상속세 인상 등 기업인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법안이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Valdés Ugalde 1997,

10) 1968년 10월 2일 발생한 틀라멜루꼬 학살사건의 기원은 같은 해 7월 30일 시작된 학생운동이었다. 이 학생운동은 ‘제도혁명당’의 전통적 권위와 규율 반대, 교육제도 개선, 대학의 자율성 쟁취 등을 주장하며 시작되었지만, 틀라멜루꼬의 삼문화광장(Plaza de las Tres Culturas)에서 군대가 학생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하고 300명 이상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대학의 충돌은 정부와 시민사회的大결양상으로 발전되었다. 더욱이, 당시 내무장관으로서 학살의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에체베리아가 1970년 집권하자 반정부 사회운동은 더욱 폭력적인 양상을 띠며 진행되었다(Poniatowska 1991).

11) ‘분배를 동반한 발전(desarrollo compartido)’ 정책은 사회복지·교육·경제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주택공급 및 고용증대, 임금인상, 지역별 계층별 공정분배와 균형발전 등을 통해 국내수요를 증대시킨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Arriola Woog 1988a, 86-87).

184-186).

에체베리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업부문의 불만이 독자적 정치세력화로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 5월 7일의 ‘기업조정위원회(CCE)’ 창설이었다. ‘기업조정위원회’ 창설의 가장 큰 의미는 1940년 이후 확립된 정부의 일방적 기업통제와 정부-기업의 수직적 협력관계를 종식시킬 기업부문의 대표적 정치기구가 최초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기업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멕시코 기업단체들이 모여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협의하고 수렴하는 한편, 정부의 정치·사회 정책들에 대한 기업부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른바 기업부문의 공식적 대표기구였다고 할 수 있다. ‘기업조정위원회’의 창립에 기여했던 멕시코 기업단체들 중에는 ‘전국산업회의 소연맹(CONCAMIN)’, ‘전국상업회의소연맹(CONCANACO)’, ‘멕시코고용주연맹(COPARMEX)’, ‘전국제조업회의소(CANACINTRA)’, ‘멕시코은행가협회(ABM: Asociación de Banqueros de México)¹²⁾, 멕시코기업인위원회(CMHN: Consejo Mexicano de Hombres de Negocios)¹³⁾, ‘멕시코보험기구협회(AMIS: Asociación Mexicana de Instituciones de Seguros)¹⁴⁾ 등이 있었다(Arriola Woog 1988).

12) ‘멕시코은행가협회(ABM)’는 1928년 정부와 금융기관간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창설된 후, 1982년 은행국유화 조치가 발표되기까지 1941년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았다. 창립 후 ‘멕시코은행가협회’는 은행업자들의 지지로 물론 재무부의

공식적 승인을 받았고, 1940년대 이후 민간은행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더욱 큰 비중을 갖게 되었다. 이 협회는 ‘기업조정위원회’의 소속단체임과 동시에 국내은행업자와 외국은행업자들로 구성된 민간협회로서, 신용대부기관, 금융기관, 국가의 투자기관, 미국의 금융기관 등도 소속되어 있었다. 이 협회의 총회는 매년 재무부장관과 멕시코 국영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 정부 경제정책 및 금융정책의 윤곽을 제시했다. 1982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은행국유화 조치에 따라 이 협회는 국유화된 신용대부기관 및 금융기관들을 대표하는 ‘멕시코은행협회(AMB: Asociación Mexicana de Bancos)’로 대체되었다(Kuper 1982, 28).

13) ‘멕시코기업인위원회(CMHN)’은 1962년 30명의 주요 대기업인들에 의해 창설되었다. 초기에는 비공식 단체였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지속적인 비밀회담을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쳐왔다. 1975년 ‘기업조정위원회’가 창설된 후 ‘멕시코기업인위원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로 부상했으나, 항상 폐쇄적 기업조직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어 ‘기업조정위원회’의 내부분열을 초래해 왔다(Mizrahi 1992, 754-755).

14) ‘멕시코보험기구협회(AMIS)’는 1947년 창설된 매우 폐쇄적이고 비밀스런 단체로서 멕시코의 보험회사들로 이루어져 있다(Puga 1993, 78-79).

‘기업조정위원회’의 창설을 계기로 멕시코 기업부문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전례 없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2년까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반(反)정부 정치활동을 공개적으로 수행한 기업단체는 ‘멕시코고용주연맹(COPARMEX)’뿐이었다. ‘멕시코고용주연맹’은 뾰르띠요(1976-82) 정부의 정치자유화 및 정치개방 조치(Middlebrook 1986, 135-138)에 반발하며, 보수야당인 ‘국민행동당(PAN: Partido Acción Nacional)¹⁵⁾을 기업부문의 정치활동 도구로 활용하자는 정치적 대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밖의 기업단체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야당을 이용한 투쟁보다는 ‘제도혁명당(PRI) 내에서의 투쟁’ 전략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야당을 이용한 정치전략, 다시 말하면 ‘국민행동당(PAN)을 통한 투쟁전략’이 ‘기업조정위원회(CCE)’의 주도적 입장으로 수용된 계기는 1982년 9월 뾰르띠요 정부에 의해 발표된 ‘은행국유화 조치’¹⁶⁾였다고 볼 수 있다. ‘은행국유화 조치’는 그 해 8월 1일의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국내자본의 해외도피를 저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정부는 엄청난 양의 국내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국내 상업은행을 국유화한다는 ‘은행국유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 조치는 오히려 그간 ‘제도혁명당 내에서의 정치전략’을 주장하던 대부분의 친정부적 기업단체들까지도 ‘국민행동당(PAN)을 통한 정치전략’¹⁷⁾을 선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

15) ‘국민행동당’은 1939년 까르데나스 정부의 급진적 정치사상과 경제개혁에 반발하며 창당되었다. 창당 초기부터 카톨릭주의를 표방해 왔지만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1982년 이후 기업인들을 당내로 영입하여 국가의 경제개입주의에 반대하고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부터이다(Loaeza 1990).

16) 뾰르띠요 정부의 ‘은행국유화 조치’는 ‘통화와 금융안정을 위한 정치법령’ 하에 진행되었다. ‘통화와 금융안정을 위한 정치법령’에는 상업은행들의 국유화뿐 아니라 엄격한 환율통제, 멕시코 거주민의 달러통장 개설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기 국영화된 상업은행들은 1991-92년 민영화될 때까지 사실상 정부에 의해 운영되었다 (Tello, 1995).

17) ‘국민행동당을 통한 기업정치 전략’은 멕시코 북부지역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국민행동당’이야말로 정부여당인 ‘제도혁명당’의 권위주의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치세력이라고 보았다. ‘소노라주상업회의소연맹(Federación de Cámaras de Comercio de Sonora)’ 대표인 스빠로우 사다(Carlos Sparrow Sada)

다(Barraza & Bizberg 1992; Luna & Tirado 1984; Tirado 1985; Luna 1985; Luna & Tirado 1985; Luna, Tirado & Valdés Ugalde 1987; Luna, Tirado & Valdés Ugalde 1991).

2) 1982-85: 정부-기업의 극단적 대립관계

1982년 9월 뽀르띠요 정부의 은행국유화 조치를 계기로 ‘기업조정위원회(CCE)’의 모든 소속단체들은 반(反)정부 정치투쟁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기업조정위원회’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은행국유화 조치는 국가의 사회주의화 음모이며, 향후 경제의 국가화가 초래할 비효율성, 관료주의, 부정부패, 전체주의는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에 결정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다(Valdés Ugalde 1997, 201).

1982년 은행국유화 조치를 계기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된 기업부문의 정치활동 유형은 대략 ‘조합적 전략(estrategia corporativa)’, ‘정당적 전략(estrategia partidista)’, ‘시민적 전략(estrategia cívica)’ 등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조합적 전략’은 1940-70년 기업부문의 정치전략과 다소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었다. 즉, ‘조합적 전략’은 정부의 기업통제 메커니즘을 수용하면서, 조합주의 정치체제를 내에서 기업부문의 정치적 입장을 표출하겠다는 수동적 정치활동이었다(Valdés Ugalde 1997, 209).

그러나 ‘정당적 전략’과 ‘시민적 전략’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기업부문 정치전략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정당적 전략’은 기업인들이 ‘국민행동당’의 후보로 출마해 정부여당과 공식적 대중선거에서 경합을 벌이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일부 기업인들이 이전부터 ‘국민행동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수행하곤 하였으나,

등 일부 급진적 기업인들은 기업정당인 ‘멕시코자유당(Partido Liberal Mexicano)’의 건립을 제안했지만, 대다수 기업인들은 기업정당의 창출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은 보이며 ‘국민행동당’을 기업 정치활동의 도구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국민행동당’은 당대표인 모르핀(Efraín González Morfín) 등 카톨릭주의 전통이념을 표방하는 인사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기업의 정치전략을 표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Barraza & Bizberg 1992, 422-434).

1982년 이후의 ‘정당적 전략’은 상당수의 기업인들이 ‘국민행동당’에 가입했다는 점, 또 기업인들의 야당활동이 매우 공개적이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정치활동과 차이가 있었다. ‘정당적 전략’은 주로 멕시코의 북부지역, 즉 바하 칼리포르니아(Baja California), 시날로아(Sinaloa), 소노라(Sonora), 코아우일라(Coahuila), 두랑고(Durango), 누에보 레온(Nuevo León), 치와와(Chihuahua) 등에서 두드러졌다 (Barraza & Bizberg 1992, 421).

‘시민적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는 몬페레이(Monterrey), 뿌에블라(Puebla), 과달라하라(Guadalajara), 쿨리아깐(Culiacán), 에르모씨요(Hermosillo), 씨우딧 오브레곤(Ciudad Obregón), 멕시코시티(México, D.F.) 등에서 있었던 ‘자유 속의 멕시코(México en Libertad)’라는 대중집회였다. ‘멕시코고용주연맹(COPARMEX)’과 ‘전국상업회의소연맹(CONCANACO)’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대중집회는 멕시코 북부도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멕시코시티의 경우 텔 라 마드리드(Miguel de la Madrid, 1982-88) 정부의 개입으로 무산되었다. 이 대중집회의 목적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행사가 경제세력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보고, 대안적 정치조직 건설의 필요성을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었다(Mizrahi 1992, 745). 또한 ‘멕시코고용주연맹’과 ‘전국상업회의소연맹’은 ‘시장경제’, ‘민간부문’,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정부’ 및 ‘관료’ 등과는 대립된다 는 이미지를 다양한 언론망을 통해 대중에게 유포시켰다. 두 기업단체는 “정부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중립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며, 경제권도 시민사회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기업단체는 ‘시민적 전략’을 통해 두 기업단체는 정부주도의 비효율적 경제가 기업주도의 역동적, 효율적 경제로 대체되어야 옳다는 여론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Valdés Ugalde 1997, 215).

3) 1985-88: 정부-기업의 화해모색 단계

1982년 이후 대다수 기업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진행된 ‘정당적 전략’과 ‘시민적 전략’은 1985년 들어 수출-금융부문 기업인들을 중심

으로 점차 퇴조되기 시작했다. 1985년에 텔 라 마드리드 정부가 GATT 가입을 결정하고 무역자유화 확대조치를 발표하자, 수출-금융부문의 기업인들은 ‘국민행동당’에 대한 지지입장을 철회하고 정부와의 화해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국민행동당’을 바라보는 수출-금융부문의 입장은 멕시코 북부지역 기업인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즉, 멕시코 북부지역 기업인들은 ‘국민행동당’을 정부여당인 ‘제도혁명당’의 경제세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반면, 수출-금융부문 기업인들은 ‘국민행동당’을 단지 정부의 조속한 무역자유화와 은행민영화 시행을 촉구하는 압력수단으로 여겼을 뿐이었다 (Mizrahi 1992, 744-745).

멕시코 북부지역 기업인들은 1985년 이후에도 계속 ‘정당적 전략’과 ‘시민적 전략’을 통한 반정부 정치활동을 전개했다. 1986년 이들은 시날로아(Sinaloa)주 주지사 선거에서 ‘멕시코 고용주연맹’ 대표와 ‘기업조정위원회’ 회장을 역임했던 끌로우띠에(Manuel J. Clouthier)를 ‘국민행동당’의 후보로 내세웠다. 끌로우띠에는 당시 ‘제도혁명당’의 ‘에너지, 광산, 국영산업부(Secretaría de Energía, Minas e Industria Paraestatal)’ 장관을 역임했던 라바스띠다(Francisco Labastida)와 경합을 벌여 ‘국민행동당’의 승리를 이끌어내었다. 1988년 대통령선거를 맞아 끌로우띠에는 ‘국민행동당’의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여 선전했으나 17%의 지지율을 획득하기도 했다(Arriola Woog 1988b, 30-33).

3. 1988-현재: ‘정부-대기업의 수평적 유착관계’

1988년 이후 멕시코의 정부-기업 관계가 수평적 유착기로 전환된 결정적 계기는 대통령선거라 할 수 있다. 국민행동당 후보이자 기업인 출신인 끌로우띠에와 또 다른 야당후보인 좌우폐목 까르데나스(Cuahtémoc Cárdenas Solórzano)의 약진이 돋보였던 1988년 대통령선거에서, 수출-금융부문 기업인들이 지지한 제도혁명당의 살리나스(Carlos Salinas de Gortari) 후보가 가까스로 당선되었다. 살리나스 정부가 출범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시

작하면서, 1980년대 초중반 반정부 정치투쟁을 수행했던 기업부문의 정치적 입장을 다소 변화하기 시작했다.

1988년 이후 멕시코 기업부문의 정치적 입장은 보수주의 부문, 자유주의 부문, 테크노크라트 부문 등에 따라 대략 세 가지로 나뉘어졌다 (Luna, Tirado & Valdés 1991). 보수주의 기업부문은 대부분 해외시장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국내시장을 지향하는 기업들을 말한다. 이 기업부문은 ‘제도혁명당’의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을 지지해 온 기업세력으로서, 정부의 경제보호주의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 ‘전국산업회의 소연맹(CONCAMIN)’과 ‘전국제조업회의소(CANACINTRA)’에 소속돼 있는 이 기업부문은 1985년 이후 실시된 정부의 무역개방 정책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제도혁명당’에 대한 지지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제도혁명당’ 내에서 비판적 지지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 기업부문에 정부의 경제지원이 부분적으로나마 할당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보수주의 기업부문과는 달리 최근까지 ‘정당적 전략’과 ‘시민적 전략’을 고수하는 기업세력은 자유주의 기업부문이다. 자유주의 기업부문은 정부보다 시장이 우월하며 이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기업부문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강화하며, 정당들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선거의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멕시코고용주연맹(COPARMEX)’과 ‘전국상업회의소연맹(CONCANACO)’을 주도하는 이 기업부문은 1988년 이후에도 계속 ‘국민행동당’을 통한 정치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 기업부문은 ‘국민행동당’에서 기업인들의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정당정치, 선거정치, 시민사회운동 등에 계속 영향력을 확대시켜 왔다.¹⁸⁾

마지막으로, 테크노크라트 기업부문은 수출-금융부문의 대기업인들에 의해 주도되며, 현재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18) 자유주의 기업부문은 1994년에 디에고(Diego Fernández de Cevallo)를, 그리고 2000년에 폭스(Vicente Fox) 등 기업인출신 인사를 ‘국민행동당’ 대통령후보로 내세워, 2000년 대선에서는 승리를 이끌어내었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부문이다. 이 기업부문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는 전문관료가 담당하고 경제는 전문경영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정부-기업 관계의 새로운 틀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테크노크라트 기업부문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기업단체들의 극소수 엘리트 대기업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멕시코기업인위원회(CMHN)’, ‘멕시코은행협회(AMB: Asociación Mexicana de Bancos)’, ‘멕시코보험기구협회(AMIS)’ 등에 소속된 이 기업인들은 ‘기업조정위원회(CCE)’에서 수적으로 열세에 있지만, 위원회의 대부분 요직을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부문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업부문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자유주의 기업부문과는 달리, 정부 고위층과 비밀스럽고 배타적인 정치연합을 형성함으로써 정부정책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수출-금융부문의 대기업인들로 구성된 테크노크라트 부문은 논문의 앞 부분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1985년경 ‘국민행동당’에 대한 지지입장을 철회한 후, 1988년 전후로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파와 비밀리에 정치연합을 형성한 기업부문이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수출-금융 기업부문은 ‘기업조정위원회’ 회장직을 둘러싼 주도권 쟁탈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GATT 가입 및 무역자유화 정책 등에 적극적 지지입장을 표명해왔다. 결국, 1987년 말에 테크노크라트 기업인이자 ‘기업조정위원회’ 회장인 곤살레스(Claudio X. González)는 델 라 마드리드 대통령과 예산기획부(Secretaría de Programación y Presupuesto) 장관이었던 살리나스와 비밀스런 정치협약을 통과시켰다. 이후 멕시코 정부-기업의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파와 수출-금융 기업부문의 협약에 형성된 ‘정부-대기업의 수평적 유착관계’라 할 수 있다.

III. ‘정부-대기업의 수평적 유착관계’ 형성요인

1980년대 말, 멕시코 정부와 대기업이 수평적 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요인은 정치 및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서, 경제상황의 악화와 제도혁명당의 정권 위기이다. 둘째는 정부조직 내부의 세력관계 변화로서, 제도혁명당의 분열과 정부 내 수구세력의 약화이다. 세 번째 요인은 기업조직 내의 세력관계 변화로서, ‘기업조정위원회(CCE)’ 지도부의 분열과 대기업의 주도권 확립이다.

1. 경제상황의 악화와 PRI의 정권위기

1987년 말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이듬해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강화되자, ‘제도혁명당(PRI)’으로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대기업 부문과 비밀스런 정치연합을 모색하게 되고, 새로운 경제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1987년 멕시코의 경제위기는 과거 5년 간 IMF가 외채재협상의 조건으로 요구한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당면계획(PIRE: Programa Inmediato de Reordenación Económica)’과 ‘경제회복 및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PAC: Programa de Aliento y Crecimiento)’의 결과로 발생했다 할 수 있다.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당면계획’은 멕시코에서 최초로 적용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서, IMF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2년 간의 단기 처방책으로 요구한 것이었다. 이 계획의 목표는 경상수지 흑자 달성을, 공공부문 적자폭 축소, 인플레이션 제한 등을 통한 당면 경제위기 극복으로서, 공공요금 및 부가가치세 인상, 공공지출 및 정부투자 축소, 임금인상의 억제, 화폐의 평가절하, 외환시장 안정화 등의 실시를 요구했다(Chávez 1996, 108-110).

그러나 1985년 이후 IMF의 자금지원 중지¹⁹⁾, 멕시코시티 대지진

발생, 국제유가의 하락 등 악재가 겹치자, 멕시코는 1982년 이후 다시 한번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쳤다(Lustig 1994, 68-69). 1986년 말, 외국은행들이 외채상환 기한을 연장해주고 60억 달러의 신규차관을 제공한다고 약속하면서 쇠약의 상황은 일단 면하게 된 멕시코 정부는, IMF와의 협상을 재개하고 ‘경제회복 및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PAC: Programa de Aliento y Crecimiento)’을 새로운 구조조정안으로 제시했다(Wadgymar 1995, 81-82).

이 프로그램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 외국인투자의 확대 등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의 원론적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시행 첫해인 1987년 10월말 외국투자가들의 투기적인 폐소화 매각이 급증하면서 그 성공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결국, 유출되는 외환을 충당하면서 멕시코의 외환보유고는 고갈되었다. 이어 11월 18일에 멕시코중앙은행은 환율시장에 대한 개입 중지를 발표했고, 1달 뒤 당 4,000페소에 이르는 큰 폭의 평가절하가 단행되었다(Wadgymar 1995, 81-82; Romo 1990, 87-88; Lustig 1994, 69; Garza 1990, 14-15).

경제상황이 이와 같이 악화되는 가운데, 집권당인 ‘제도혁명당’은 1988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창당 후 최악의 정권위기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거전 양상이 ‘제도혁명당’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야당후보들에 대한 국민적 인기도가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자, 60여 년 이상 장기집권한 ‘제도혁명당’은 이 상황을 심각한 정치적 위기국면이라 보았다. 집권당인 ‘제도혁명당’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신자유주의 개혁파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좌우폐목 까르데나스가 ‘민족민주전선(FDN: Frente Democrática Nacional)’의 후보로 출마하여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²⁰⁾

19) IMF는 델 라 마드리드 정부에게 1983년 GDP 대비 공공부문 적자를 7.5%로 감소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9.0%에서 멈췄고, 1984년에는 5.5%를 요구했으나 7.7% 달성을 그쳤고, 1985년에는 무려 9.6%의 공공부문 적자를 보였다. 따라서 델 라 마드리드 정부는 IMF에게 요구조건을 이행할 수 없음을 밝힐 수밖에 없었고, IMF는 이에 대응해 즉시 자금지원을 중단했다(Wadgymar 1995, 71-72).

20) 좌우폐목 까르데나스는 1987년 당시 그다지 유명한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부친이자 대통령이었던 라사로 까르데나스(1934-40)의 민중지향적 이미지에 힘입어 좌파정당,

게다가, ‘국민행동당’의 기업인 출신 후보, 끌로우띠에(Manuel J. Clouthier)의 경우도 멕시코의 중·북부지역과 멕시코시티의 기업인들로부터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1987년 말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멕시코고용주연맹(COPARMEX)’과 ‘전국상업회의소연맹(CONCANACO)’ 소속의 대부분 기업인들은 ‘국민행동당’ 후보인 끌로우띠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aldés Ugalde 1997, 204-205). 그러나 1988년 들어와 ‘민족민주전선’의 꾸아우떼목 까르데나스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자, 이를 우려하는 상당수의 기업인들은 자신의 표를 ‘제도혁명당’으로 모아주기 위해 ‘국민행동당’에 대한 지지입장을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정부여당과 보수적 기업인들은 당면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획기적인 타개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 결실이 바로 ‘경제연대협약(PSE: Pacto de Solidaridad Económica)’이었다. 1987년 12월 23일 발표된 ‘경제연대협약’의 내용은 당면 경제위기의 원인이 ‘고인플레이션’에 있다는 전제 하에, 모든 사회부문과의 타협과 협조를 기반으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었다.

IMF식 안정화정책이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하여 긴축재정과 외국인투자 확대를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경제연대협약’은 가격·임금·환율의 엄격한 통제원칙 하에 공공투자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 무역자유화 확대, 투자자유화 등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경제연대협약’은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으로는 고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기업·노동자·농민 등의 논의와 타협이 선행되는, 일종의 사회협약을 거친 반(反)인플레이션 격퇴법이라 할 수 있다(Chávez 1996, 89).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연대협약’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파와 수출·금융 기업부문간의 폐쇄적이고 비밀스런 정치협약이라 일컬어진다. 그 이유는 ‘경제연대협약’에 참여했던 노동자대표와 농민대표가 사실상은 ‘제도혁명당’의 구성부문으로서 친정부 성향을 지니고

노동자, 농민, 지식인, 예술가, 학생 등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Semo 1994, 219).

있었고, 기업부문의 경우도 ‘기업조정위원회(CCE)’ 대표로 참여하는 기업인들이 대부분 수출-금융 기업부문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함으로써 다른 기업부문의 입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²¹⁾

2. PRI의 분열과 정부 내 수구세력의 약화

1980년대 중반, 정부여당인 ‘제도혁명당’에서 그간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걸림돌이었던 수구세력이 대거 탈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도혁명당’의 신자유주의 개혁파는 당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정부내각의 주요 요직에도 대거 영입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내각 구성의 변화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파 세력과 극소수 대기업 부문의 은밀한 정치협약을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제도혁명당의 오랜 수구세력들은 당내 영향력 약화로 인해 정부와 대기업 부문의 배타적 정치협약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1987년 말에 성립된 ‘경제연대협약’은 사실상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파 세력과 ‘기업조정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한 수출-금융부문 대기업인들간 협약이라 할 수 있다. ‘테크노크라트’라 불리는 신자유주의 개혁파 세력은 뿐만 아니라 집권기인 1970년대 말 멕시코 정치무대에 등장하여, 1980년대 정부여당인 ‘제도혁명당’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 새로운 정치행위자이다. 기존 ‘제도혁명당’ 정권의 전통적 관료들이 멕시코국립자치대학(UNAM: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에서 법학을 전공한 경우가 많은 반면, ‘테크노크라트 집단’은 멕시코의 사립대학이나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경제학이나 행정학 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많았다(Thacker 1996, 230).

21) 와드히마르(Arturo Ortiz Wadgymar)에 의하면, ‘경제연대협약’은 정부, 대기업인(기업조정위원회 대표), 천정부 노동조합 지도자 사이에 이루어진 협약이었다. 일반 노동자들은 ‘경제연대협약’의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988년 1월과 2월에 인플레이션이 각각 15.5%와 8.3%에 이르렀으나,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조정한다는 초기의 약속을 어기고 임금인상률을 3%로 고정시켰다. 1988년 4번의 협약이 있었으나 노동임금은 항상 인플레이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인상되었다(Wadgymar 1995, 96-97).

뽀르띠요 정부가 ‘테크노크라트 집단’의 인사들을 정부각료로 기용하기 시작한 계기는 1970년대 말 광대한 석유유전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이용해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할 전문적인 경제관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기용된 테크노크라트 각료들 중에는 ‘예산기획부’ 장관이었던 멜 라 마드리드(Miguel de la Madrid)와 ‘재무 및 공공신용부’ 장관이었던 뮤뇨스(David Ibarra Muñoz) 등이 있었다(Gutiérrez 1992, 301-302).

‘제도혁명당’의 수구세력과 ‘테크노크라트 집단’간 갈등은 1981년 후반, 뽀르띠요 대통령이 멜 라 마드리드²²⁾를 차기 대통령후보로 지명하면서 촉발되었다. 대통령후보 선출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던 1981년 3월에는 국제 유가가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멕시코 경제가 양호한 상태였다. 그러나 같은 해 중반 이후 국제유가 하락과 국제금리의 상승으로 석유수출에 의존한 멕시코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뽀르띠요 대통령은 곧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관심을 경제가 아닌 정치 쪽으로 돌리고자, 1981년 10월로 예정이었던 여당 대통령후보 발표를 9월 19일로 앞당겼다. 오랫동안 ‘제도혁명당’의 주도권을 장악해 왔던 수구세력조차도 대통령의 차기후보 결정이 전혀 없는 ‘깜짝쇼’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발표된 데 놀라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할 수 없을 정도였다(Gutiérrez 1992, 295-307).

멜 라 마드리드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1982년 12월 이후,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테크노크라트 부문의 인사들을 대거 경제분야의 각료로 기용했다. 그 중에는 재무부 장관인 에르소그(Jesús Silva Herzog), 예산기획부 장관인 살리나스(Carlos Salinas de Gortari), 멕시코중앙은행장인 아구아요(Miguel Mancera Aguayo) 등이 있었다(Bailey 1988, 57-58). 더욱이, 1982년 외채위기 이후 외채재협상과 신

22) 멜 라 마드리드는 1957년에 멕시코국립자치대학(UNAM)에서 “1857년 헌법의 경제사상(Economic Thought of the 1857 constitution)”이라는 논문으로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1964년에는 멕시코중앙은행의 후원으로 하버드대학에서 공공행정학을 전공했다. 귀국 후, 멜 라 마드리드는 ‘재무와 공공신용부(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에 소속되어 있었고, 에체베리아 집권기에는 ‘멕시코석유회사(PEMEX)’의 재정부국장으로 일했다. 뽀르띠요의 대학시절 제자이기도 한 멜 라 마드리드는 1979년에 ‘예산기획부’의 장관으로 정식 임명되었다(Gutiérrez 1992, 311-312; Bailey 1988, 57).

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추진과정에서 테크노크라트 부문의 정부 내 주도권은 더욱 강화되었다. 다만 노동부나 국영회사들의 경우만 전통적 수구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Teichman 1997, 33-37).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테크노크라트 부문의 주도권 장악에 대한 ‘제도혁명당’ 수구세력의 불만은 1986년 꾸아우페목 까르데나스와 뮤노스 레도(Porfirio Muñoz Ledo)의 ‘민주주의파(Corriente Democratizadora)’ 결성을 초래했다. 이듬해인 1987년 텔 라 마드리드 대통령이 테크노크라트인 살리나스를 차기 대통령후보로 지명하자, ‘민주주의파’의 반발은 극에 달해 결국은 ‘제도혁명당’을 탈당하였다. ‘민주주의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군소 좌파정당들²³⁾과 연합하여 ‘민족민주전선(FDN)’을 결성하고, 파우페목 까르데나스를 대통령후보로 추대하기에 이르렀다(Camp 1997, 196). 파우페목 까르데나스는 선거유세 과정에서 ‘텔 라 마드리드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멕시코경제를 외국은행과 미국에 완전히 종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시 경제위기 상황에 편승해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했다.

이유야 어찌됐건, ‘민주주의파’가 ‘제도혁명당’을 탈당하자 ‘제도혁명당’에서 테크노크라트 부문의 주도권은 한층 강화되었다. 1987년 말 이루어진 ‘경제연대협약’에서 테크노크라트 부문은 전통적 수구 세력의 별다른 저항 없이 일부 대기업인들과 은밀하고 폐쇄적인 정치협약을 성립시킬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민주주의파’의 탈당에 따른 당내 수구세력의 약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Thacker 1996, 164-167).

살리나스 집권 후,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파와 수출-금융부문 기업인들은 더욱 협소하고 배타적인 정치연합을 유지하며, 정책결정 및 정책시행 과정에서 독점적 권력을 향유할 수 있었다. 살리나스 대통령의 편파적인 각료구성은 ‘정부-대기업의 수평적 유착관계’가

23) 당시 ‘민족민주전선’에 참여한 군소정당들은 ‘정통 멕시코혁명당(PARM: Partido Auténtico de la Revolución Mexicana)’, ‘민중사회주의당(PPS: Partido Popular Socialista)’, ‘친까르데나스국가재건당(PFCRN: Partido del Frente Cardenista de Reconstrucción Nacional)’, ‘멕시코사회주의당(PMS: Partido Mexicano Socialista)’ 등이 있었다.

유지,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Thacker 1996, 200). 집권 직후에 살리나스는 정부 각료직의 83%를 예산기획부와 재무부 출신 테크노크라트들로 메우고, 극소수 수출-금융부문 대기업인들과 친분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정책운영에 있어서 이 두 부문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켰다.

살리나스 정부 하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테크노크라트들은 대통령 고문인 몬또야(José Córdoba Montoya), 중앙은행장인 만세라 (Miguel Mancera), 재무부 장관인 아스뻬(Pedro Aspe), 무역산업부장관인 뿌체(Jaime Serra Puche), 그리고 예산기획부 장관인 세디요 (Ernesto Zedillo Ponce de Leon) 등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40대 초반의 젊은 기술관료들로서, 미국의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험이 있었다. 만세라, 뿌체, 세디요는 예일대학에서, 아스뻬는 MIT에서 각각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살리나스는 하버드대학에서 공공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몬또야는 스탠포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료한 바 있었다(Teichman 1997, 40-41).

3. CCE 지도부의 분열과 대기업의 주도권 확립

수출-금융부문 대기업인들은 1980년대 중반에 있었던 ‘기업조정위원회(CCE)’ 회장직을 둘러싼 타 기업부문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에 따라 수출-금융 기업부문은 향후 정부와 있을 제반 협상이나 협약의 체결과정에 전체 기업부문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1987년 ‘경제연대협약(CCE)’에서 정부 신자유주의 개혁파, 테크노크라트 부문의 파트너였던 기업부문은 수출입업자 및 금융업자로 구성된 극소수의 대기업이들이었다. 수출-금융 기업부문은 과거에는 그리 주요한 기업세력이 아니었으나, 1980년대 중반에 ‘기업조정위원회’에서 주도권을 확립한 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파트너로 등장했다.

수출-금융 기업부문과 멕시코 북부지역 기업인들 사이에 ‘기업조

정위원회’ 회장직을 둘러싼 경쟁은 1983년 이후 격화되었다. 같은 해, 멕시코 북부출신 기업인인 끌로우띠에가 ‘기업조정위원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자, 수출-금융 기업부문은 보수적 기업단체인 ‘멕시코 기업인위원회(CMHN)’ 회장이었던 곤살레스(Claudio X. González)를 후임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응하여 멕시코 북부출신 기업인들은 주도하는 ‘전국상업회의소연맹(CONCANACO)’과 ‘멕시코고용주연맹(COPARMEX)’은 차빠(Jorge A. Chapa)를 회장후보로 내세워 승리로 이끌어낸 적이 있었다.

2년 후인 1985년에 다시 곤살레스가 수출-금융 기업부문의 회장 후보로 추대되자, ‘멕시코고용주연맹’ 대표인 바사고이띠(José María Basagoiti)가 ‘전국상업회의소연맹’의 지지를 받으며 회장후보로 나섰으나, 결국은 곤살레스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Rodríguez 1991, 467-468). 실제로, 곤살레스가 ‘기업조정위원회’ 회장이 된 1985년 이후 정부와 기업부문은 화해모색기에 들어갔으며, 멕시코 정부는 일부 기업부문의 지지 하에 GATT에 가입하고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사실이다(Tirado 1997, 18).

‘기업조정위원회’ 회장직을 둘러싼 경쟁에서 수출-금융 기업부문의 주도권 장악이 초래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은 1987년 말의 ‘경제연대협약’이라 할 수 있다. 1987년 말에 ‘경제연대협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수출-금융부문 기업인들이 ‘기업조정위원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정부와 빈번한 접촉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은 수출-금융부문 기업인들과 정부가 비밀리에 정치협약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²⁴⁾

‘경제연대협약’ 이후 치러진 1989년 ‘기업조정위원회’ 회장선거에서 멕시코 북부지역 기업인들과 수출-금융 기업부문간 대립관계는

24) 사실상, 곤살레스 회장과 멜라 마드리드 대통령, 살리나스 당시 예산기획부 장관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관계라 알려진다. 멕시코 정부-기업 관계에 대한 대표적 연구가인 리까르도 라파도에 의하면, 곤살레스 회장은 후에 어느 대학의 강연회에서 1987년에 정부의 테크노크라트 부문과 수출-금융부문의 일부 대기업인 사이에 모종의 비밀스런 정치협약이 있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다.

회장을 선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정도로 격렬해졌다. 그 이유는 1988-89년 ‘기업조정위원회’ 회장이었던 수출-금융부문의 기업인 레고레따(Agustín F. Legorreta)가, 1989년 정부와의 ‘경제연대협약’ 재협상에서 다른 기업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을 독단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1989년 ‘경제연대협약’ 재협상에는 기업인들에게 불리한 세계개혁안, 공공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인상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업조정위원회’에 소속된 다른 기업단체들의 반발은 매우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진 1989년 ‘기업조정위원회’ 회장선거에서, 후보물망에 오른 멕시코 북부지역 기업인은 ‘전국상업회의소연맹(CONCANACO)’의 부대표 가르사 사다(Gerardo Garza Sada)와 ‘멕시코고용주연맹(COPARMEX)’ 대표 오세호(Jorge Ocejo)의 추천을 받은 아르다빈(Bernardo Ardavín)이었다. 이를 두 후보 모두 반(反)정부적 입장을 견지하는 인물이었고, 아르다빈의 경우는 과거 ‘멕시코고용주연맹’ 대표를 역임할 때 정부와 심한 마찰을 일으킨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수출-금융부문의 기업인들은 ‘전국산업회의소연맹(CONCAMIN)’의 회장이었던 보르또니(Vicente Bortoni)를 회장후보로 추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멕시코 북부지역 기업인들이 보르또니의 친정부적 성향을 비판하고 나서자, 수출-금융 기업부문은 보르또니 대신 까르코바(Luis Germán Cárcoba)를 후보로 다시 임명했다. 이와 같이 1989년 ‘기업조정위원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두 기업부문간 갈등과 분열이 침예화되자, 결국 회장선거를 결렬되었고 ‘멕시코은행협회(AMB)’ 회장인 베가(Rolando Vega)가 임시회장으로 결정되기에 이르렀다(Rodríguez 1991, 467-468).

1989년 11월에 베가의 주관 하에 회장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지만, 멕시코 북부지역 기업인들과 수출-금융 기업부문간 대립은 그칠 줄을 몰랐다. 멕시코 북부기업인은 ‘전국상업회의소연맹’의 대표 수아레스(Eduardo García Suárez)를 후보로 내세워, ‘기업조정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단체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멕시코 북부 기업인으로서 또 다른 후보

인 가르사 사다도 ‘기업조정위원회’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지적하면서, 소규모 기업단체든 지방의 기업단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Rodríguez 1991, 468).

그러나 선거의 결과는 수출-금융 기업부문의 후보인 베가의 승리로 돌아갔다. 1990년에 들어와 미국·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상이 진행되고 매해 말 ‘경제연대협약’ 재협상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수출-금융부문 기업인들의 참여는 매우 빈번해졌고, 이 기업인들의 입장이 대부분 수용되었다. 따라서 ‘기업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를 받아온 멕시코 북부지역 기업인들 및 대다수 중소기업인들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밖에 없었다.

IV. ‘정부-대기업 수평적 유착관계’의 한계와 문제점

1980년대 말 들어, 멕시코의 정부와 기업부문은 과거의 수직적 유착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수평적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정부-기업의 수평적 유착관계는 정확하게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파와 수출-금융 기업부문간에 형성되었는데, 1987년 말 ‘경제연대협약’의 성사가 그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경제연대협약’은 가격·임금·환율에 대한 엄격한 통제 하에 인플레를 안정시킨 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제공했다.

‘경제연대협약’을 통한 정부-기업의 수평적 유착관계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적극적 추진에 상당히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정치의 민주화 과정에는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그 이유는 ‘경제연대협약’이 정부의 극소수 테크노크라트 부문과 수출-금융부문 대기업인들간의 지극히 폐쇄적이고 비밀스런 정치협약을 통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연대협약’의 지나친 협소성과 폐쇄성은 ‘제도 혁명당’의 수구세력과 ‘기업조정위원회’의 대다수 기업단체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제도혁명당’ 내에서 수구세력과 테크노크라트 부문간 대립은 1994년 대통령선거의 후보결정을 계기로 다시 격화되었다. 살리나스 정부는 집권기 동안 경제구조조정, 무역자유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경제문제에만 역점을 두었을 뿐, 정치개혁 및 정치자유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1993년 말 미국의회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승인되자, ‘제도혁명당’의 테크노크라트 부문 내에서는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서둘러야 하고 정치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당시 분위기에 편승하여 포괄적 정치개혁과 급진적 정당개혁을 주장하는 꿀로시오(Luis Donaldo Colosio)가 1993년 11월에 대통령후보로 지명되었다. 살리나스가 집권한 6년 동안 ‘제도혁명당’의 소수파로 전락해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거의 배제되었던 전통적 수구세력은 테크노크라트인 꿀로시오의 후보지명에 내심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1월 1일에 치아빠스(Chiapas)주에서 무장봉기가 발생하자, 수구세력은 치아빠스에 군대를 투입하여 진압해야 한다는 강경책을 주장한 반면, 테크노크라트 부문은 정치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제도혁명당’ 내의 두 세력간 대립은 1994년 3월 23일 떠후아나(Tijuana)에서 대통령후보인 꿀로시오가 연설 중 암살되고, 같은 해 9월 28일 당대표인 루이스 마씨우(José Francisco Ruiz Massieu)가 살해되는 사태를 맞으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꿀로시오 후보의 암살 사건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규명되고 있지 않지만, 루이스 마씨우 사건의 경우는 ‘제도혁명당’의 수구세력이 깊숙이 개입돼 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제도혁명당’ 수구세력은 살리나스 정부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와 정치개혁 조치에 불만을 품고, 이를 저지하고 당내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로 그와 같은 정치테러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기업조정위원회’의 경우에도 수출-금융 기업부문이 주도권을 장악한 후, 정부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첫째, ‘기업

조정위원회’에 소속된 기업단체들의 기능이나 목적이 서로 중첩된다 는 점이다. 예컨대, ‘전국상업회의소연맹(CONCANACO)’은 상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의 조직이고, ‘전국산업회의소연맹(CONCAMIN)’은 제조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멕시코고용주연맹(COPARMEX)’은 고용주‘조합’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멕시코기업인위원회(CMHN)’는 극소수의 멕시코 최고기업인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기업조정위원회’의 소속단체가 다양한 조직형태를 갖고 있 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전국상업회의소연맹’과 ‘전국산업회의소 연맹’은 회의소별로 조직되어 있고, ‘멕시코은행협회(AMB)’, ‘멕시코 보험기구협회(AMIS)’는 기업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멕시코기업인위 원회’는 개별 기업인들로 이루어졌다.

셋째,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각각의 소속단체들의 규모가 다 르고 가입자수도 서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은 단체별로 단지 1개만이 부여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기업조정위원회’에 소속된 8개 단체²⁵⁾들은 회원수나 조직규모에 상관없이 각각 1개의 투표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1997년 당시 각 기업단체의 가입자수는 ‘전국상업회의소연맹’이 50만명, ‘전국농축업위원회’가 25만명, ‘전 국산업회의소연맹’이 12만 5천명, ‘멕시코고용주연맹’이 3만명, ‘멕시 코보험기구협회’가 59명, ‘멕시코기업인위원회’가 37명, ‘멕시코은행 협회’가 25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단체가 각각 ‘기업조정 위원회’의 1/8의 권한을 갖게 하는 점은 상대적으로 많은 회원수를 보유한 기업단체들에게는 불평등한 처우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업조정위원회’의 권력이 극소수 기업인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1985년 이후 ‘기업조정위원회’ 회장직을 도맡아온 수출-금융 기업부문은 ‘기업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의 독점해

25) 현재 CCE에 소속된 8개의 기업가단체들은 CONCANACO, CONCAMIN, COPARMEX, CMHN, ABM, AMIS, AMB, ‘전국농축업위원회(CNA: Consejo Nacional Agropecuario)’이다. CANACINTRA와 ‘멕시코시상업위원회(México-CANACO: Cámara Nacional de Comercio de la Ciudad de México)’는 각각 CONCAMIN과 CONCANACO에 소속되어 있지만, 단지 자문역할만 할 수 있을 뿐 투표권이 없었다(Puga 1997, 124).

왔다. 멕시코 북부지역 기업인들이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인들은 ‘기업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이 지도부에 의해 권위적이고 수직적으로 결정된다고 비판해 왔다.

다섯째, ‘기업조정위원회’에 소속된 대부분의 기업단체들이 산업별 또는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성격의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산업회의소연맹’의 경우가 두드러진 예로써, 75개의 산업체의 소와 42개의 기업협회가 가입되어 있고, 산업별로도 제조업, 광산개발, 요식업, 이발소 등 다양한 기업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멕시코 고용주연맹’에도 57개 지역의 270여 개 상업 및 산업체의 소들이 있었다(Tirado 1997, 20).

일부 중소기업인들은 수출-금융 기업부문이 ‘기업조정위원회’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1980년대 중반부터, 권위적 정책결정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독자적 정치조직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전국제조업자협회(ANIT: Asociación Nacional de Industriales de Transformación)’와 ‘전국영세기업연맹(CONAMIN: Confederación Nacional de los Microindustriales)’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전국제조업자협회(ANIT)’는 멕시코 정부가 GATT 가입을 결정한 1985년에 ‘전국제조업회의소(CANACINTRA)’를 탈퇴했고, 1986년에 결성된 ‘할리스꼬주 영세기업연합(Federación de la Microindustria de Jalisco)’에 기원을 두는 ‘전국영세기업연맹(CONAMIN)’은 1991년에 창설되었다. ‘전국제조업자협회’와 ‘전국영세기업연맹’은 각각 ‘국민행동당’과 ‘제도혁명당’을 지지하지만, ‘기업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994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도산하거나 ‘기업조정위원회’ 회비를 지불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자(Puga 1997, 129-131), ‘전국제조업자협회’와 ‘전국영세기업연맹’은 1995년에 중소기업 부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독자적 대표기구로서 ‘전국중소기업위원회’(Consejo Nacional de la Micro, Pequeña y Mediana Empresa)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Luna & Tirado 1997, 164-165).

‘기업조정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일부 중소기업인들의 탈퇴에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멕시코 상공부(SECOFI: Secretaría de Comercio y Fomento Industrial)는 1996년 들어와 기존의 상공회의소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1월 1일 시행된 이 상공회의소법은 ‘전국산업회의소연맹’과 ‘전국상업회의소연맹’에 대한 기업의 의무가입 조항²⁶⁾을 삭제하는 대신에 정부의 기업관리 체계로서 ‘멕시코기업정보체계(SIEM: Sistema de Información Empresarial Mexicano)’ 조항을 첨가했다. ‘멕시코기업정보체계’는 모든 멕시코 기업단체의 규약과 조직구성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이 단체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까지 갖고 있지 않는다 (Arriola Woog 1997).

1997년 상공회의소법 개정은 멕시코 정부-기업 관계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큰 의미는 그간 멕시코 기업통제 메커니즘의 근간이 되었던 ‘1941년 상공회의소법’의 독소조항들이 개정되었다 데 있다. 이에 따라 기업단체들은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정치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독자적 정치조직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조정위원회’에 가입을 원치 않는 기업단체들은 자신의 경제적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독자적 대표기구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1997년 상공회의소법의 또 다른 의의라 할 수 있다.

최근까지 멕시코 정부-기업 관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파와 수출-금융의 기업부문간 수평적 유착관계였다고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7년 상공회의소법 제정을 계기로 기업의 정치적 대표기구라고 하는 ‘기업조정위원회’의 독보적 위상은 점차 상실되고 있고, 게다가 2000년 7월 선거에서는 71년 장기집권한 ‘제도혁명당’이 패배하고 ‘국민행동당’의

26) 1941년 상공회의소법은 모든 기업들이 ‘전국산업회의소연맹’과 ‘전국상업회의소연맹’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상공회의소법을 통해 기업부문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한 것이었다. 1975년에 창설된 ‘기업조정위원회’는 1941년 상공회의소법에 저촉되지 않았으나, 내부에 ‘전국산업회의소연맹’과 ‘전국상업회의소연맹’의 수적 비중이 대단히 높았으므로 정부가 이를 통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폭스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했다. '국민행동당'의 후보였던 폭스의 당선은 그간 멕시코 북부지역 기업인들이 추구해온 '정당적 정치 전략'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그간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멕시코 북부 지역 기업인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서 멕시코의 정부-기업 관계를 전망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무려 71년 동안이나 '제도혁명당'의 통치를 받아온 멕시코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제도혁명당'은 어떠한 방법으로 퇴진할지, 폭스의 차기 행정부가 추구할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수출-금융부문 기업인들과 멕시코 북부지역 기업인들간 세력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등을 주시하고 분석하는 것이, 향후 멕시코의 정부-기업 관계를 전망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Acuña. Carlos H. "El análisis de la burguesía como actor político." Ricardo Tirado. coord. *Los empresarios ante la globalización*. México, D.F.: UNAM.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Sociales.
- Anguiano, Arturo. *El Estado y la política obrera del cardenismo*. México, D.F.: Ediciones Era, 1993.
- Arriola Woog, Carlos. *Las organizaciones empresariales contemporáneas*. Guadalajara: Universidad de Guadalajara, 1982.
- _____ *Los empresarios y el Estado, 1970-1982*. México, D.F.: UNAM. Miguel Ángel Porrúa, 1988a.
- _____ "La campaña electoral de Manuel J. Clouthier en Sinaloa, 1986." *Foro Internacional* 29(1), (July-September), 30-48,

- 1988b.
- _____ "La ley de Cámaras empresariales y sus confederaciones. *Foro Internacional* 37(4), (October-December), 634-660, 1997.
- Bailey, John. *J. Governing Mexico: The Statecraft of Crisis Management*. Hounds Mills, Basingstoke, Hampshire,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8.
- Barraza, Leticia & Ilán Bizberg. "El Partido Acción Nacional y el régimen político mexicano." *Foro Internacional* 31(3), (January-March), 1992.
- Boschi, Renato R.. "Empresarios y sociedad en América Latina: la herencia estatal y las tradiciones analíticas en un marco de cambios." Ricardo Tirado. coord. *Los empresarios ante la globalización*. México, D.F.: UNAM.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Sociales, 1994.
- Camp, Roderic Ai. *La política en México*. México, D.F.: Siglo XXI, 1996.
- Chávez, Gerardo González. "La crisis actual y el Estado neoliberal." En Alicia Girón & Genoveva Roldán. coords. *México: Pasado, presente y futuro*. México, D.F.: Siglo XXI.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Económicas. UNAM, 1996.
- Concheiro Bórquez, Elvira. *El gran acuerdo: Gobierno y empresarios en la modernización*. México, D.F.: UNAM. Ediciones Era, 1996.
- Cypher, James M.. *Estado y capital en México: Política de desarrollo desde 1940*. México, D.F.: Siglo XXI, 1992.
- Garza, Esthela Gutiérrez. "Presentación: El sexenio del crecimiento cero." En Esthela Gutiérrez Garza. ed. *Testimonios de la crisis: 4. Los saldos del sexenio (1982-1988)*. México, D.F.: Siglo XXI, 1990.

- Gutiérrez, Arturo Sánchez. "La elección de Miguel de la Madrid." En Carlos Martínez Assad. coord. *La sucesión presidencial en México: 1929-1988*. México, D.F.: Nueva Imagen, 1992.
- Hamilton, Nora. México: *Los Límites de la autonomía del Estado*. México, D.F.: Ediciones Era, 1991.
- Hansen, Roger. *La política del desarrollo mexicano*. México, D.F.: Siglo XXI, 1971.
- Heredia, Blanca. "Mexican Business and the State: The Political Economy of a Muddled Transition." In Ernest Bartell, C.S.C. & Leigh A. Payne. eds. *Business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Pittsburgh and London: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95.
- Horcasitas, Ricardo Pozas. "La consolidación del nuevo orden institucional en México (1929-1940). En Pablo González Casanova. coord. 1993. *América Latina: Historia de Medio Siglo 2. Centroamérica, México y El Caribe*. México, D.F.: Siglo XXI, 1993.
- Kuper, Gina Zabludovsky. *Las organizaciones empresarios en México: Comportamiento político-ideológico, 1946-1952*. México, D.F.: Tesis de Licenciado en Sociología, Facultad de Ciencias Políticas y Sociales, UNAM, 1979.
- Loaeza, Soledad. "Derecha y democracia en el cambio político mexicano: 1982-1988." *Foro Internacional* 30(4), (April-June), 631-658, 1990.
- Luna, Matilde & Ricardo Tirado. "Los empresarios y el gobierno: Modalidades y perspectivas de relación en los años ochenta."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April-June), 5-15, 1984.
- _____ "Transformaciones del corporativismo empresarial y tecnocratización de la política." *Revista Mexicana de*

- Sociología. (January-March), 125-137, 1985.
- _____, & Ricardo Tirado. "Los empresarios se deciden." Revista Mexicana de Ciencias Políticas y Sociales. (April-June), 65-77, 1985.
- _____, & Francisco Valdés Ugalde. "Businessmen and politics in Mexico, 1982-1986." In Sylvia Maxfield. ed.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in Contemporary Mexico*. Monograph series 20. Center for U.S.-Mexican Studies. San Diego: University of California, 1987.
- _____, "Los empresarios y la política en México, 1982-1986." En Recardo Pozas & Matilde Luna. coords. *Las empresas y los empresarios en el México contemporáneo*. México, D.F.: Grijalbo, 1991.
- _____, "Organización y representatividad de las micro y pequeñas empresas en México." Comercio Exterior 47(2), (February), 159-166, 1997.
- Lustig, Nora. México: *Hacia la reconstrucción de una economía*. México, D.F.: El Colegio de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94.
- Meyer, Lorenzo & José Luis Reyna. "México. El sistema y sus partidos: Entre el autoritarism y la democracia." En Lorenzo Meter & José Luis Reyna. coords. 1989. *Los sistemas políticos en América Latina*. México, D.F.: Siglo XXI. Universidad de las Naciones Unidas, 1989.
- Meyer, Rosa Ma. & Eduardo Flores Clair. "Empresarios y vida Cotidiana (1820-1870)." En Cristina Puga & Ricardo Tirado (coords.). *Los empresarios mexicanos, ayer y hoy*. México, D.F.: UNAM, UAM, COMECOSO, Ediciones el Caballito, 1992.
- Middlebrook, Kevin J. "Political liberalization in an authoritarian

- regime: The case of Mexico." In Guillermo O'Donnell, Philippe C. Schmitter & Laurence Whitehead. eds.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egime: Latin America*. Baltimore,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 Mizrahi, Yemile. "La nueva oposición conservadora en México: La radicalización política de los empresarios norteños." *Foro Internacional* 32(5), (October-December), 744-771, 1992.
- Poniatowska, Elena. *La noche de Tlatelolco*. México, D.F.: Ediciones Era, 1991.
- Puga, Cristina. *México: Empresarios y poder*. México, D.F.: UNAM. Miguel Ángel Porrúa, 1993.
- _____ "El futuro de las organizaciones empresariales." En Juan Manuel Ramírez & Jorge Regalado. coords. *El debate nacional, 4. Los actores sociales*. México, D.F.: UNAM. Diana, 1997.
- Purcell, John F.H. & Susan Kaufman Purcell. 1977. "Mexican business and public policy." In James M. Malloy. ed. 1977. *Authoritarianism and Corporatism in Latin America*. London: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Rodríguez, Rogelio Hernández. "Los problemas de representación en los organismos empresariales." *Foro Internacional* 31(3), (January-March), 446-471, 1991.
- Romo, Héctor Guillén. *El sexenio de crecimiento cero*. México, D.F.: Ediciones Era, 1990.
- Schneider, Ben Ross. "Big business and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Confidence and concertation in Brazil and Mexico." In Sylvia Maxfield & Ben Ross Schneider. eds. *Business and the State in Developing Countrie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Semo, Ilán. "Democracia de élites versus democracia societal: Los paradigmas de la pretransición mexicana." En Ilán Semo et.al.. *La transición interrumpida: México, 1968-1988*. México, D.F.: Universidad Iberoamericana. Nueva Imagen, 1994.
- Sidicaro, Ricardo. "Consideraciones sociológicas(en clave clásica) sobre la relación Estado-empresarios en América Latina: la herencia estatal y las tradiciones analíticas en un marco de cambios." Ricardo Tirado. coord. *Los empresarios ante la globalización*. México, D.F.: UNAM.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Sociales, 1994.
- Sotelo Valencia, Adrián. *México: Dependencia y modernización*. México, D.F.: Ediciones El Caballito, 1993.
- Teichman, Judith. "Mexico and Argentina: Economic Reform and Technocratic Decision Making." *Studies in Comparativa Internacional Development* 32(1), (Spring), 31-55, 1997.
- Tello, Carlos. *La nacionalización de la banca en México*. México, D.F.: Siglo XXI, 1984.
- Thacker, Strom Cronan. "From Silent to Active Partner: Big Business, the State and Free Trade in Mexico." Ph. D. dis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996.
- Tirado, Ricardo. "Los empresarios y la derecha en México."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Enero-Marzo), pp. 105-123, 1985.
- _____ & Matilde Luna. "El Consejo Coordinador Empresarial de México. De la unidad contra el reformismo a la unidad para el TLC(1975-1993)."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October-December), 27-55, 1995.
- _____ "El futuro del corporativismo empresarial." *El Cotidiano* 81, (January-February), 17-21, 1997.
- Valdés Ugalde, Francisco. *Autonomía y legitimidad: Los empresarios*,

- la política y el Estado en México.* México, D.F.: Siglo XXI.
UNAM, 1997.
- Valenzuela Feijóo. José. *El capitalismo mexicano en los ochenta.*
México, D.F.: Ediciones Era, 1986.
- Viguera, Aníbal. "Los empresarios, la política y las políticas en
América Latina. Una propuesta de análisis comparado." Ricardo Tirado. coord. *Los empresarios ante la globalización.*
México, D.F.: UNAM.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Sociales, 1994.
- Wadgymar, Arturo Ortiz. *Política Económica de México 1982-1995.*
México, D.F.: Editorial Nuestro Tiempo, 1995.